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체제 지지 지속 요인 분석*

강 우 진**

•요 약•

한국에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다섯 가지 분석 모델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 지지 지속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권위주의 체제 지지 지속 결정요인은 복합적이었다. 갈등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측정된 아시아 가치 모델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유보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다양한 차원의 수행력 접근법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다. 정부 수행력 모델 중에서는 의·식·주와 같이 기본적 필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권위주의 체제 지지로 이어졌다. 민주주의 수행력 모델 중에서는 선거가 실질적 선택을 제공하는지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핵심 제도에 대한 불신이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에 중요한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권위주의 체제 지지 지속에 대한 정책적 처방 또한 다차원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권위주의 향수, 아시아 가치, 경제성장 우선주의, 제도 신뢰, 세대 간 이동성

I. 문제의 제기

제3의 물결을 거쳐 민주화가 확산된 이후, 많은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민주주의가 “유일한 게임의 규칙(the only game in town)”이 되었고 나아가 시대정신으로까지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다.¹⁾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이 곳곳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에서 지체와 좌절을 겪었다. 학자들의 기대와 달리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진전은 제한적이었으며, 오히려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²⁾와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³⁾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혼합 정치체제가 출현하고 지속되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이로써 학계에서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확산보다는 ‘후퇴’(recession)⁴⁾, 나아가 공고화의 역진인 ‘탈공고화’(deconsolidation)를⁵⁾ 논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동아시아의 젊은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비켜 있는 듯 보였다. 다수의 연구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와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등 주요 지표에서도 뚜렷한 위기 신호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역진 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민주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던 한국에서 발생한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한국 민주화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외적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었다. 이 글의 중심 주제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현상은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둘러싼 한국 사회 여론의 분열이었다.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국가기관을 침탈한 현장을 목도한 시민들의 탄핵 반대 여론은 사태 진행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여 2025년 3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37%까지 증가했다. 탄핵 반대 여론은 이념지형과 당파성에 따라서 크게 갈렸다.⁶⁾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태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민주주의 체제에

1996.

2) Diamond, Larry, *The Spirit of Democracy: The Struggle to Build Free Societies Throughout the World*, New York: Times Books, 2008.

3) Steven Levitsky and Lucan A.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4) Diamond, Larry, “Facing Up to the Democratic Recession,” *Journal of Democracy*, vol. 26, no. 1, 2015, pp.141-155.

5) Roberto Stefan Foa and Yascha Mounk, “The Democratic Disconnect,” *Journal of Democracy*, vol.27, no. 3, 2016, pp.5-17; Roberto Stefan Foa and Yascha Mounk, “The Signs of De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28, no. 1, 2017, pp.5-15.

6) 탄핵 반대 여론은 이념지형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 유권자의 경우 탄핵 반대 여론은 단지 7%인 반면에 보수 유권자의 경우 72%까지 치솟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반대 여론은 단1%인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압도적인 90%에 달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15호(2025년 3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정당별·기관별 신뢰 여부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헌재 #선관위』,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45> (검색일: 2025.8.15).

대한 인식은 지지 정당과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2025년 동아시아연구원 정치 양극화 조사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가 다른 어떤 체제보다 항상 낫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1,514명) 중 75%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90.6%가 같은 질문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61.4%로 급락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체제라는 시민적 지지가 당파적 태도에 따라서 크게 갈라져 있는 현상이 내란 사태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권위주의자의 일탈이 불러일으킨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 확산된 K-Democracy에 발전 이면에 심화되어 온 현상인가?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촛불 항쟁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촛불 항쟁 이전 시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중요하지만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현상이 드러난다. 아시아 바로미터(Asian Barometer Survey, ABS) 1차 조사(2003)와 4차 조사(2015)를 비교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선호 비율은 69.6%에서 65.23%로 감소했지만,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21.53%에서 25.37%로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권위주의 정부를 선호하거나 민주주의·권위주의를 구분하지 않는 ‘권위주의 체제 지지층’ 비율은 30.04%에서 34.77%로 확대되었다. 이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상당수가 권위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지하거나 강화했음을 시사한다.

12.3 내란 이전까지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라는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서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를 민주화 40년이 지난 시점에도 시민이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거나 민주주의 지지를 유보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다음의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누구인가? 이들의 사회적 배경은 어떠한가? 권위주의 체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지지 지속성이 한국 민주주의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분석틀

이 연구는 앞선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한 다섯 가지 분석 모델을 검증한다. 다섯 가지 분석 모델은 문화적 접근법과 수행력 중심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적 접근법은 아시아 가치 모델과 사회문화 모델을 통해서 검증한다. 수행력 중심 접근법은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부수행력과

민주주의 체제 수행력으로 구분하여 검증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실증 분석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먼저, 아시아 가치(Asian Value Model) 모델이다. 두루 알듯이 아시아 가치는 동아시아에서 왕조 국가의 중심적 지배이념으로서 역할을 했다.⁷⁾ 아시아 가치는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⁸⁾ 사회적 가치 차원으로는 가족 중심주의, 사회적 위계,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 또는 사회적 가치의 우선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차원의 가치로서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 국가의 도덕적인 성격(moral state),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응(conformity or deference to authority)이 대표적이다.

아시아 가치와 민주적 지지를 연결한 소수의 앞선 연구⁹⁾들이 주목한 특징은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응 정향이다.¹⁰⁾ 이러한 특징은 대표적인 유교 교리인 삼강오륜(Three Fundamental Bonds and Five Constant Virtues, 三綱五倫)에서 잘 드러난다.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유명한 유교 교리인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와 같은 사상이 이를 잘 나타낸다. 이 시각에 따르면, 권위에 순응하는 정향을 가진 시민들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권위에 결정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ABS 1차 조사를 활용한 박종민과 신도철의 연구에 따르면,¹¹⁾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시아 가치(특히 위계적 집합주의와 가부장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아시아 가치로부터의 분리(detachment) 정향은 권위주의 체제에 지지로부터 시민들을 이탈시키는 데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민주주의 지지로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한편, 달톤과 옹은 세계가치 조사를 토대로 동아시아 6개국과 서구 민주주의 4개국에서 아시아 가치의 중심 가치인 권위적 정향이 민주주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¹²⁾ 그들의 분석 결과는 문화 결정론(culture is destiny)과는 반대로 권위주의 지표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동아시아와 서구 민주주의에서 차이가 없었다.

7) Hahm, Chaibong, "South Korea's Miraculous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19, no. 3, 2008, pp.128-142.

8) Park, Chong-Min and Doh Chull Shin, "Do Asian Values Deter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Asian Survey*, vol. 46, no. 3, 2006, pp.341-361.

9) Dalton, Russell and Nhu-Nhu Ong, "Authority Orientations and Democratic Attitudes: A Test of the 'Asian Values' Hypothesi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 no. 2, 2005, pp.211-223; Park, Chong-Min and Doh Chull Shin, *ibid.*

10) Dalton, Russell and Nhu-Nhu Ong, *ibid.*

11) Park, Chong-Min and Doh Chull Shin, *op. cit.*

12) Dalton, Russell and Nhu-Nhu Ong, *op. cit.*

하지만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응 정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더욱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시아 가치가 민주주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앞선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가치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는 단일하지 않고 다차원적이다.¹³⁾

한국은 민주화 이후 40년이 이미 지났다. 아시아 가치의 핵심 요소로서 권위에 대한 순응은 과거 체제(권위주의 체제)가 아닌 현재 체제(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시아 가치 중에서 사회적 안정과 질서(social order and harmony) 요소에 주목한다. 많은 앞선 연구들이 사회적 갈등과 대비되는 사회적 조화를 아시아 가치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으며 그 영향력을 확인했다.¹⁴⁾ 민주주의 엔진은 갈등이다.¹⁵⁾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는 아시아 가치를 여전히 내면화한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인 사회적 갈등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서 (현재) 민주주의 체제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치문화 접근법의 중심에는 시민문화 모델이 있다.¹⁶⁾ 시민문화 모델은 개인적 수준의 이론과 사회적 수준의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수준의 이론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신뢰가 주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사회화 과정을 강조한다.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개성(personality traits)과 낙관주의(optimism)로부터 사회적 신뢰가 만들어진다. 즉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과 심리적 특성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개인의 사회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¹⁷⁾ 이렇게 형성된 사회 신뢰는 일시적인 경험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토크빌의 고전적인 저작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수준의 모델은 관련 문헌이 많이 축적되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논의

13) Zhai, Y., "Values of Deference to Authority in Japan and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58, no. 2, 2017, pp.120-130.

14) Myers, T.E., "Asian Values Debate," in D.K. Chatterjee (ed.), *Encyclopedia of Global Justice*, Dordrecht: Springer, 2011; Park, Chong-Min and Doh Chull Shin, op. cit.

15) Schattschneider, E.E.,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16)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17) Cawvey, Matthew, Matthew Hayes, Damarys Canache, and Jeffery J. Mondak,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Interpersonal and Political Trust," in Eric M. Uslaner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가 있다.¹⁸⁾ 이 모델에 따르면 시민적 활동은 시민들 사이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향하는 기술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⁹⁾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사회적 기반이 된다.²⁰⁾ 사회적 자본 모델은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수준의 이론²¹⁾이지만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 사이에도 나아가서 개인 사이에도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다.

시민문화 모델이 권위주의 체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앞선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시민문화 모델이 민주주의 지지 또는 민주적 정당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 존재한다. 왕은 일본, 한국, 대만, 3국을 대상으로 아시아 바로미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대인 신뢰가 민주주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²²⁾ 그의 분석은 동아시아 3국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양상을 확인해주었다. 일본과 대만에서는 대인 신뢰가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가 시민들의 민주주의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대인 신뢰가 중요한 영향 변수였다. 한편, 윤광일은 그의 종속변수가 민주주의 지지 자체는 아니었지만, 다층수준 분석을 통해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²³⁾ 공식적인 조직 활동이 사회적 자본 이론의 예상과는 달리 정치 신뢰와 정치적 연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면, 시민문화 모델에 따르면 시민 활동과 적극적으로 연계된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시민들에 비해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 우선주의 모델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양적인 경제성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압도적 영향력이다.²⁴⁾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한

18) Putnam, Robert D., op. cit, 1993; Putnam, Robert D., op. cit, 2000.

19) Glanville, Jennifer L., Pamela Paxton, and Yusheng Wang, "Social Capital and Generosity: A Multilevel Analysi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45, no. 3, 2016, pp.526-547; Paxton, Pamela and Robert Ressler, "Trust and Participation in Associations," in Eric M. Uslaner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20) Robert D. Putnam, op. cit, 1993.

21) Norris, Pippa, "Social Capital and the News Media,"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7, no. 1, 2002, pp.3-8.

22) Wang, Ching-Hsing, "Social Networks, Interpersonal Trust, and Support for Democracy in East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vol. 3, no. 2, 2015, pp. 1-10.

23) Yoon, Kwang-Il, "The Individual-level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for Democracy in East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4, no. 1, 2017, pp.61-84.

24) 강우진, 『박정희 노스텔지어와 한국 민주주의』,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국의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박정희 정권의 지배이념으로서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을 종종 지칭하는 박정희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²⁵⁾ 또한 민주화 이후에도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구나,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민주주의 담론을 비판하고 우회하기 위한 대항 담론으로서 빈번하게 동원됐다. ‘민주주의 과잉’ 담론 또는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나’라는 담론이 대표적이다.²⁶⁾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의 구축과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루 알듯이 박정희 정권 시기 재벌 중심의 대외지향적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 시기 한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박정희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하면서 전통적 농업사회였던 한국은 근대적인 산업사회로 변모하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경험했던 높은 경제성장률은 전두환 정권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이 구축된 후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경험, 즉 산업화-민주화의 경로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차원에서만 볼 때 권위주의 정권(박정희~전두환) 기간과 민주화 이후 시기의 수행력은 대조적이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하였지만, 집권 후 금융실명제로 대표되는 일련의 개혁과 탈군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문민정부는 민주화의 서막을 열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로 막을 내렸다. 전례 없는 경제위기는 평화적 정권교체로 이어졌고 국민의 정부가 등장했다. IMF 체제 속에서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3년 반 만에 구제금융 체제를 졸업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이 줄도산하였으며 정리해고가 본격화되었고 비정규직 고용이 대폭 늘었다. 고도성장 시대를 지난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한국은 경제위기의 고통의 터널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했다.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과 긴급조치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탄압의 시기였다. 전두환 정권은 12·12 쿠데타와 광주항쟁 그리고 삼청교육대가 나타내듯이 박정희 정권 시기와 연장선상에서 기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는 특정한

25) 강정인,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서울: 아카넷, 2014.

26) 강우진, “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3호, 2015, pp.25-55.

시민에게 박정희 정권 시기는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이 구축되었던 역동적인 시기였다. 또한 전두환 시절은 경제는 좋았던 시절로 기억된다.

많은 시민이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성장에 미친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연구원(East Asia Institute)의 ‘한국인 정체성 연구’ 시리즈 2005~2015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박정희 정부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도 최저 절반 이상(56.66% 2015년)에서 3분의 2 이상(67.34% 2005년)에 달했다, 반면에 민주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여에 대한 평가는 부침이 심했다. 경제위기를 3년 반 만에 극복한 국민 정부의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8.21%(2005년)~58.85%(2015)에 그쳤다. 특히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5.48%(2005년)~11.03%(2015년)로 나타나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민들의 대조적인 평가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10% 내외를 기록했던 급속한 경제성장 단계를 지난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저성장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전례 없는 경제위기와 민주화가 함께 왔다. 따라서 한국 시민들은 경제성장의 차원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가진 장기적인 우월성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민주화 이후 집권한 이른바 민주 정부는 박정희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담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김영삼의 세계화 담론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던 국민의 정부와 이를 계승했던 참여정부의 경제발전 담론은 성장주의에 종속된 변형된 경제성장 우선주의였다.

요약하면, 경제성장 우선주의 모델에 따르면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내면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정부 수행력 모델(Government Performance Model)이다. 다수의 앞선 연구들이 정치적 수행력과 경제적 수행력을 중심으로 정부 수행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시민들의 민주적 지지, 특히 민주주의 수행력을 나타내는 민주주의 만족(satisfaction with democrac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정치적 수행력 변수는 많은 경우 투입(input) 중심의 접근법과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 수행력 변수는 산출(output) 중심의 접근법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글이 주목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는 정부 차원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체제 원칙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련된다는 것이다.²⁷⁾ 그렇다면 정부의 수행력이 집권당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민주주의 정부

27) Norris, Pippa, *Democratic Deficit: Critical Citizens Revisit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와 권위주의 정부와 같이 체제 수준의 평가로 이어지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투표 문헌에서 많이 사용되는 해당 시기 국가 경제 또는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는 권위주의 향수와 연관된 정부 수행력 측정 변수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²⁸⁾ 왜냐하면 수행력과 산출은 (단기간에도) 상승과 하락을 겪을 수 있지만, 체제 수준의 지지인 포괄적 지지(diffuse support)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의 누적된 수행력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변수가 포괄적 지지를 측정하는데 더 적절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가할레스는 다층 분석을 활용하여 정부의 효과성과 민주주의 지지를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²⁹⁾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정책 결정의 형성과 수행의 질로 측정된 정부 효과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수준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다섯째, 민주주의 수행력 모델이다. 동아시아 맥락에서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아시아의 퍼즐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와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지지 수준의 차별성에 관한 것이었다.³⁰⁾ 앞선 연구들은 중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수행력에 기반을 둔 체제 정당성에 대해서 주목했다.³¹⁾

이 글의 연구 질문은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되는 한국에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가 왜 지속되는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수준의 수행력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수준의 수행력을 측정하는 변수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체제 수준의 영향변수로서 민주주의 수행력에 주목한다. 체제의 정당성은 체제의 효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³²⁾

그렇다면 한국이 당면한 시대 과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는 민주주의 지지가 수요 공급의 함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정의를 분석함으로써 추론할 수 있다. 동아시아 시민들은 규범과 절차(norms and

28) 강우진, 위의 논문, 2015.

29) Magalhães, Pedro C.,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Support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3, no. 1, 2014. pp.77-97.

30) Chu, Yun-han and Min-hua Huang, "The Meanings of Democracy: Solving an Asian Puzzle," *Journal of Democracy*, vol. 21, no. 4, 2010, pp.114-122; Chu, Yun-han, Hsin-hsin Pan, and Wen-chin Wu, "Regime Legitimacy in East Asia: Why Non-Democratic States Fare Better than Democracies," *Global Asia*, vol. 10, no. 3, 2015, pp.98-105.

31) Ortmann, Stephan and Mark R. Thompson, "China and the 'Singapore Model,'" *Journal of Democracy*, vol. 27, no. 1, 2016, pp.39-48.

32) Magalhães, Pedro C., op. cit.; Lipset, Seymour Martin,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1959, pp.69-105.

procedures) 그리고 자유(freedom and liberty)와 같은 절차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과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같은 실질적 또는 결과적 차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있다.³³⁾ 실제로 ABS 3차 조사를 활용한 후왕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시민의 70%, 한국 시민의 59%, 대만 시민의 65%가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³⁴⁾

이를 기반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화두로 부상한 소득 분배³⁵⁾와 세대 간 이동성을 포함한 한국 민주주의 체제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주목한다. 두루 알듯이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민주주의는 경제위기라는 외적 충격과 탄핵이라는 내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기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심화된 한국의 경제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OECD 국가 중 한국(2017 자료)의 지니계수는 0.35로서 상위 9위에 있다.³⁶⁾ 하지만 불평등에 대한 한국 민주주의의 대응은 취약했다. 2018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21.9%에 그쳤다.³⁷⁾

한국의 누적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근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세습중산층’이라는 최근의 책 제목이 상징하듯이 한국은 절대 기회가 열린 역동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³⁸⁾ 다양한 여론조사가 이를 확인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도 심각하다. ABS 4차 조사에 따르면, 자신과 가족들의 노력에 비해 받는 소득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세대 간 이동성(“부모의 세대에 비해 자신의 세대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가?”)에서 한국은 대만이나 심지어 몽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의 한국에서 소득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43.25%,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7.75%였다. 이는 대만(34.2%, 9.35%)과 몽골(43.23%, 10.02%)에서의 부정적 인식보다 더 높았다.

33) Chu, Yun-han, Hsin-hsin Pan, and Wen-chin Wu, op. cit.; Huang, Min-hua, “Cognitive Involvement and Democratic Understanding,” in Tun-jen Cheng and Yun-han Chu (eds.), Routledge Handbook of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Abingdon: Routledge, 2017, pp.239–254.

34) Huang, Min-hua, ibid.

35) ABS 4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분배 부정적인 인식은 73.30%로 나타나 조사대상 전체 14개국의 부정적인 인식 평균(60.68%) 보다 15% 이상 높았다.

36) OECD, *Beyond GDP: Measuring What Counts for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Paris: OECD Publishing, 2018; OECD, “Income Inequality,”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검색일: 2025.6.11).

37) OECD, “Social Spending,” <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 (검색일: 2025.6.11); Statista, “Taiwan Inequality and Social Spending,” <https://www.statista.com> (검색일: 2025.6.11).

38)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서울: 생각의힘, 2020.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민주주의 3국(한국·일본·대만)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내재적인(inherent)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는 민주주의를 결과적 차원으로 정의하는 도구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결과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민들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수행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요컨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세대 간 이동성에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Ⅲ. 연구설계

이 글이 실증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동아시아 바로미터(Asian Barometer Survey) 4차 조사 중 한국 자료다. 이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10월 27일~12월 2일). 이 조사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과 문화적 태도 그리고 정치 체제에 대한 선호를 묻는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접근 가능한 여론조사 자료 중에서 이 글의 연구 목적과 가장 부합한 조사이다.³⁹⁾

종속변수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를 묻는 다음의 문항에 기반을 두어 측정되었다: “다음 진술 중에서 당신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범주는 “민주주의는 다른 정부 형태보다 항상 더 우월하다(1점),” “어떠한 상황에서는 권위주의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보다 우월하다(2점),”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 체제든 권위주의 체제든지 상관없다(3점)”로 구성되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유보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선호(0점)와 민주주의 체제지지 유보(권위주의 정부가 우월하다 또는 민주주의 체제든 권위주의 체제든 상관없다) (1점)로 재구성하였다.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통해서 권위주의 향수(민주주의 정부가 우월하다 대 권위주의 정부가 우월하다 조합)와 민주주의지지 유보(민주주의 정부가 우월하다 대 권위주의 정부가 우월하다 또는 상관없다 조합)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독립변수는 앞선 이론적 논의에 기반을 두어 다섯 가지 모델로 구성되었다. 먼저, 아시아 가치 모델 중에서 갈등에 대한 태도 변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단을 조직화하면

39) 익명의 한 심사자가 지적했듯이, 본 조사의 시점(2015)을 고려할 때 2016~2017년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촛불항쟁과 같은 민주화의 ‘시대 효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권위주의 체제 지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ABS 4차 조사의 활용은 여전히 타당하다. 민주화 이후 다양한 시기를 포괄하는 시민 정치 성향의 변화를 분석하는 통합적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공동체의 조화가 저해될 것이다”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⁴⁰⁾ 응답범주는 4점 척도로서 1점(매우 동의)~4점(매우 반대)로 구성되었다. 실증분석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해석의 편이를 위해서 거꾸로 코딩하였다.

둘째, 시민문화 모델은 대인신뢰 변수와 접촉하는 사람 수 변수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대인 신뢰 변수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만하다는 진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4점 척도로서 매우 동의한다(1점)~매우 반대한다(4점)로 구성되었다. 접촉하는 사람 수 변수는 “평균적으로 주중에 몇 사람을 접촉하십니까? 전화, 메일,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귀하께서 대화하거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0~4명)~5(50명 이상)의 범주를 가진다. 실증 분석에서는 거꾸로 코딩하였다.

셋째, 경제성장 우선주의 모델은 경제성장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를 묻는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자료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점: 경제성장이 분명히 더 중요하다, 2점: 경제성장이 다소 더 중요하다, 3점: 민주주의가 다소 더 중요하다, 4점: 민주주의가 분명히 더 중요하다, 5점: 둘 다 중요하다)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 중에서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1~2점)를 대상으로 가변수를 도출하였다.

넷째, 정부 수행력 모델은 앞선 이론적 배경 논의에서 논의한 것처럼 집권당의 지지율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적인 변수보다는 민주주의 정부의 수행력과 관련된 변수를 통해서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반응성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 두 변수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정부 반응성 평가 변수는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로서 1점(매우 잘 반응한다)~4점(전혀 반응하지 않는다)으로 측정되었다. 정부 문제해결능력 변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로서 1점(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4점(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로 구성되었다.

다섯째, 민주주의의 수행력 모델은 정부 수준의 수행력이 아니라 체제 수준의 수행력을

40) 갈등에 대한 태도는 아시아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아니다. 앞선 연구는 아시아 가치의 중요한 차원으로서 사회적 조화(social harmony)를 강조하고 이차원의 영향력을 보고했다(Park, Park, Chong-Min and Doh Chull Shin, op. cit.; Myers, T.E., op. cit.).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요소인 갈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가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측정하는 변수로 구성되었다. 체제 수준의 수행력은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투입(input) 차원,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 체제의 산출(output) 차원을 측정하였다. 투입 차원의 수행력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선거가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을 제공하는지를 묻는 변수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이 변수는 “우리 나라의 선거가 유권자에게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 사이의 실질적인 선택을 얼마나 자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기반을 두어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4점 척도로서 1점(항상)~4점(거의 아니다)의 범주로 측정되었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핵심 제도(중앙정부, 정당, 의회, 법원)에 대한 신뢰 변수를 통해서 제도 신뢰 변수를 도출했다. 네 변수 모두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1점: 매우 신뢰~4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네 변수를 통합하여 4로 나누어 제도신뢰 변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체제 산출 차원은 세대 간 이동성 변수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당신의 세대는 생활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적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범주는 5점 척도로서 1점(실질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5점(실질적으로 더 적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가지 이론적 모델 이외에 누락 변수(omitted variables)의 편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통제변수를 추가하였다. 먼저 기본적인 필요 충족에 대한 평가 변수가 추가되었다. 이 변수는 “사람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한다” 문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서 측정되었다. 두 변수의 응답 변수는 모두 4점 척도로서 1점(매우 동의)~4점(매우 반대)도 구성되었다. 또한 소득, 연령, 교육, 성별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IV. 분석결과

1. 누가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가?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시민은 누구인가? <표 1>은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제시한다. 먼저, 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교육과 권위주의 체

제 지지 사이에는 선형적 관계가 나타났다. 무학의 경우 사례 수(4)가 너무 적어서 큰 의미를 두어 해석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졸업, 중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이상 졸업 세 집단을 비교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권위주의 향수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줄었다(43.64⇒28.80)

〈표 1〉 권위주의 체제 지지자의 사회적 배경

구분		민주주의 체제지지	권위주의 체제지지 (A)	민주주의체제 든 권위주의 체제 상관없음 (B)	민주주의 체제 지지유보 (A+B)
학력	무학	25(1)	50(2)	25(1)	75
	초등학교 졸업	56.36(31)	32.73(18)	10.91(6)	43.64
	중·고등학교 졸업	62.19(380)	28.31(173)	9.48(53)	37.79
	전문대/대졸이상	71.20(262)	20.65(20)	8.15(30)	28.80
연령	20대	68.97(140)	22.17(45)	8.87(18)	31.04
	30대	64.49(138)	23.56(50)	12.15(26)	35.71
	40대	64.63(159)	25.20(62)	10.16(25)	35.36
	50대	61.57(141)	29.69(68)	8.78(20)	38.47
	60대이상	66.67(178)	25.84(69)	7.49(20)	33.29
소득	1분위	67.95(159)	22.65(53)	9.40(22)	32.05
	2분위	64.36(130)	28.71(58)	6.93(14)	35.64
	3분위	61.64(188)	28.52(87)	9.84(30)	38.36
	4분위	65.69(180)	24.45(67)	9.85(27)	34.3
	5분위	66.35(69)	23.08(24)	10.58(11)	33.66
주관적 사회 지위	상위	100(4)	0	0	0
	중상위	62.4(221)	31.36(111)	6.21(22)	37.57
	중간	64.95(378)	24.23(141)	10.82(63)	35.05
	중하위	72.13(132)	19.13(35)	8.74(16)	27.87
	하위	59.26(16)	22.22(6)	18.52(5)	40.74
성별	남성	63.60(387)	27.38(158)	9.01(52)	36.39
	여성	66.84(389)	23.37(136)	9.79(57)	33.16
거주지	농촌	70.69(82)	22.41(26)	6.90(8)	29.31
	도시	64.62(674)	25.70(268)	9.68(101)	35.38
합		65.23(756)	25.37(294)	9.40(109)	34.77(403)

출처: ABS 4차 조사(한국).

참고: 수치는 퍼센트, 괄호 안 수치는 사례 수.

둘째,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선형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령대 별로 권위주의 향수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비교적 큰 차이 없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체제 지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29.69%였다.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연령대는 20대로 22.17%였다. 하지만 두 연령대에서 나타난 비율의 차이는 7.52%에 그쳤다. 연령대를 초월하여 일정한 비율의 권위주의 향수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셋째, 5급간으로 측정된 가구 소득과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과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의 권위주의 체제 지지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인 3분위(28.52%)와 1분위(22.65%)의 차이는 5.87%에 그쳤다.

넷째, 주관적 (가족)사회 지위 변수와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 사이에도 뚜렷한 유의미한 관계는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상위계층 보다 하위 계층에서 권위주의 체제 지지 비율이 높았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 지지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4.01% 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여섯째, 거주지 규모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 지지 차이도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직관적인 판단과는 반대로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도시지역 거주자에서 나타난 권위주의 향수의 비율이 근소하게 만큼 높았다(3.20%)

2.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표 2〉는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모델 1〉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를 기반으로 하여(1)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거나 권위주의나 민주주의나 상관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한 그룹으로 묶어(2) 민주주의 체제 지지 유보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모델 2〉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를 기반으로 권위주의 체제 지지 선호와 권위주의 체제든 민주주의 체제든 상관없다는 선호(정치체제 지지 유보)를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 2〉 권위주의 체제 지지 요인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

구분	모델 1		모델 2		
	민주주의 지지	유보	권위주의 체제지지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상관없음	상대적 위험 비율
변수	계수(표준오차)	상대적 위험 비율	계수(표준오차)	상대적 위험 비율	계수(표준오차)
아시아 가치 모델	0.220(0.091)**	1.246	0.195(0.100)*	1.215	0.332(0.153)**
사회문화 모델	-0.046(0.112)	0.954	0.034(0.125)	1.034	-0.256(0.184)
접촉하는 사람 수	-0.152(0.086)	0.858	-0.130(0.094)	0.877	-0.219(0.151)
경제성장 우선주의 모델	0.405(0.143)**	1.499	0.458(0.159)**	1.582	0.244(0.236)
정부 수행력 모델	-0.049(0.105)	0.951	-0.132(0.116)	0.876	0.195(0.176)
정부의 민제 해결능력	-0.229(0.130)*	0.794	-0.096(0.143)	0.907	-0.640(0.218)**
정부의 반응성	0.278(0.092)**	1.320	0.305(0.103)**	1.357	0.225(0.152)
실질적 선택	0.451(0.138)***	1.571	0.474(0.152)**	1.607	0.387(0.232)*
제도 신뢰	-0.274(0.073)***	0.760	-0.439(0.084)***	0.644	0.159(0.119)
세대 간 이동성	0.282(0.008)**	1.326	0.251(0.108)**	1.286	0.362(0.161)**
기본필요 충족	-0.220(0.053)***	0.802	-0.174(0.059)**	0.839	-0.354(0.088)***
교육	-0.012(0.005)**	0.988	-0.006(0.006)	0.993	-0.028(0.010)**
연령	0.118(0.060)*	1.125	0.089(0.067)	1.093	0.204(0.102)**
소득	-0.235(0.140)	0.790	-0.287(0.155)*	0.750	-0.076(0.232)
성별(여성)	-0.247(0.972)	0.780	-1.026(1.083)	0.358	-0.403(1.580)
상수					
사례수	1,014		1,014		
Pseudo R ²	0.0644		0.0707		

출처: ABS 4차 조사(한국).

참고: *p≤.10; **p≤.05; ***p≤.001; 〈모델 1〉과 〈모델 2〉 모두 기본 모델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다; 상대적 위험비율(relative risk ratio)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기존 집단에 비해서 해당 집단이 계수만큼 발생할(증가하거나 감소할) 상대적 위험 비율을 의미한다.

먼저, 갈등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측정된 아시아 가치 모델의 영향력을 살펴보자. 먼저 <모델 1>에서 갈등에 대한 태도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민주주의 지지유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계수의 방향을 고려할 때 아시아 가치 모델이 예측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단을 조직하면 공동체의 질서가 침해될 것이라고 믿을수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모델 2>를 통해서 검증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와 정치체제 지지 유보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도 갈등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글의 실증 분석 결과는 앞선 연구⁴¹⁾가 주목하지 않았던 아시아 가치 중에서 갈등에 대한 태도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대인 신뢰와 접촉하는 사람 수 두 변수를 통해서 측정된 사회문화 모델은 민주주의체제 지지 유보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 2>에서 검증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향수와 민주주의 대 정치체제 지지 유보 조합에서도 사회문화 모델은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 문화론의 시각을 따르는 앞선 연구에 따르면 사회문화 모델은 다양한 차원의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사회단체 활동이 제도 신뢰⁴²⁾, 이익집단 활동이 대인 신뢰⁴³⁾, 종교 활동이 정부신뢰⁴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글의 분석 결과가 나타내는 것은 시민문화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낮은 시민적 활동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 유보나 권위주의의 향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모델 1>에서 민주주의 지지 유보 결정 요인으로서, <모델 2>에서는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이 글은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 요인으로서 박정희 체제의 유산인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영향력에 주목했다.⁴⁵⁾ 한국 사람들은 권위주의 시절 급격한 경제발전을 경험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를 경험했다. 고도성장 시기를 지난 민주화 시대에 민주주의 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발전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 시민들 중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내면화한 시민들은 양적인 성장을 기준으로 권위주의 체제 시기의 고도성장과

41) Park, Chong-Min and Doh Chull Shin, op. cit.; Dalton, Russell J. and Nhu-Nhu Ong, op. cit.

42) 박희봉·조희창·조연상,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2003, pp.45-66.

43) 박통희,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1호, 2010, pp.67-97.

44) 이승중,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1호, 2010, pp.99-119.

45) 강우진, 위의 책, 2019.

민주주의 체제의 저성장을 비교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두 체제에 대한 수행력 차이에 대한 평가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로 이어졌을 수 있다. <모델 1>과 <모델 2>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예측을 입증하였다. 이미 저성장단계에 들어선 한국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질이다. 이제 경제성장률과 같은 단편적인 지표를 넘어서는 질 좋은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넷째, 정부 수행력 모델은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변수와 정부의 반응성 변수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이 중에서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변수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 모두 중요한 영향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정부의 반응성 변수는 <모델 1>에서 민주주의 체제 지지 유보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0.10 수준) <모델 2>에서는 민주주의 대 정치체제 무관심 조합에서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다섯째, 선거에서 실질적 선택, 세대 간 이동성, 제도 신뢰 세 변수로 측정된 민주주의 체제 수행력 변수는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으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확인되었다. 선거가 실질적인 선택을 제공하는지는 민주주의 체제의 투입(input) 차원을 측정한 변수다. 선거에서 실질적 선택 변수는 민주주의 지지 유보(모델 1)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모델 2>를 통해서 측정한 권위주의 향수나 정치체제 지지 유보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도 신뢰 변수는 <모델 1>의 민주주의 체제지지 유보 결정요인과 <모델 2>의 권위주의 향수, 정치체제 지지 유보 결정요인(0.10 수준)으로서 일관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세대 간 이동성 변수도 민주주의 체제지지 유보(모델 1)와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모델 2)으로서 중요한 영향변수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영향력의 방향이다. 변수의 측정을 고려할 때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자신의 세대가 훨씬 더 적은 기회가 있다고 믿을수록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거나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정권 시기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했다. 이 시기 사회는 역동적이었고 많은 사람이 교육을 징검다리 삼아 중산층으로 상승을 경험했다. 이에 반하여 민주화의 진전 과정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와 동반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늘었고 한국은 더는 사회적 이동성이 열린 역동적인 사회가 아니라 교육 기회조차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닫힌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반대였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자신의 기회가 더 적다고 판단하는 비판적 시민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보다 더 균등한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추론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교육과 기본적 필요 변수가 시민들의 체제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10급 간으로 측정된 교육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모델 1>과 <모델 2>의 모든 조합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였다.

사람들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식할수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지지를 유보(모델 1)하고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가지거나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보(모델 2)할 가능성이 컸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성취한 한국 사회에서 의·식·주 기본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 쟁점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한국의 절대 빈곤율은 문민정부 이전 시기(1982~1992) 10년 동안 연평균 8.4%로 급속히 감소했지만, 민주화 이후 오히려 증가되거나 정체된 상태이다. 상대적 빈곤율의 추이도 다르지 않다. 1982~1992년 기간 동안 감소하였지만 1993년부터 증가하여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12.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2000년 도에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⁴⁶⁾

V. 결론과 함의

비서구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에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은 정치문화 접근법과 수행력 접근법의 시각에서 도출된 다섯 가지 분석모델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은 단지 문화적이거나 수행력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두 차원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이었다. 문화적 접근법 중에서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었으나 갈등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측정된 아시아 가치 모델은 권위주의 향수와 민주주의 체제지지 유보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다양한 차원의 수행력 접근법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 우선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지지 유보와 권위주의 체제 지지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영향변수로 확인

46)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추이와 요인분석,” 『KDI 정책포럼』, 제215호, 2009.

되었다. 경제성장 우선주의 시각에서 볼 때 권위주의 정권 시기와 민주화 이후 시기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은 연평균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한국형 경제성장 모델의 기초를 마련했다. 반면에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IMF 경제위기)를 경험하였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 더구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된 경제적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내면화한 시민 중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두 체제를 평가하는 시민들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글의 경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민주주의 수행력 모델 중에서는 선거가 실질적 선택을 제공하는지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핵심 제도에 대한 불신이 권위주의 향수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에 중요한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 심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찾아들지 않고 있는 권위주의 향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갈등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 체제의 투입(선거)과 과정(제도 신뢰), 그리고 산출(수행력)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요인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복잡이어야 한다.

먼저, 두루 알듯이 사적인 영역에서 갈등이 민주적으로 대표되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이러한 면에서 슈나이더의 ‘민주주의의 엔진은 갈등이다’라는 언명은 민주주의 핵심을 지적인 것이다.⁴⁷⁾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화 4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사회갈등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광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의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며 사회통합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사회갈등 수준도 높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회적 포용의 수준도 대단히 낮다.⁴⁸⁾

둘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민주화된 한국에서 국가 정책의 목표는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질 좋은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 민주주의의 화두는 여전히 총량적 의미의 더 많은 성장이다. 한국 사회가 단순한 경제성장률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걸맞은 포용적 지표⁴⁹⁾를 수용할 때 단순한 성장률

47) Schattschneider, op. cit.

48) BBC,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bbc-global-survey-world-divided> (검색일: 2025.6.11); 권위주의 향수의 요인으로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포용적 인식이 높은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이 글의 분석모형인 아시아 가치 모델에서 전제하는 것처럼 문화적 요인인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엄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 향수는 잦아들 것이다.

셋째, 이 글의 분석 결과는 민주화 이후 한세대 이상 동안 향상되지 않은 제도 불신이 권위주의 체제 지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구 민주주의 맥락에서는 비판적 시민 논의⁵⁰⁾에서 잘 나타나듯이 민주주의 체제 수행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당성의 회의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비판적 시민’ 변수를 포함한 후속 연구에서 좀 더 분명히 규명되어야겠지만 이 글의 분석 결과는 누적된 제도 불신이 체제 정당성에 대한 회의로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참고문헌

- 강우진, “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3호, 2015.
- 강우진, 『박정희 노스텔지아와 한국 민주주의』,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 강정인,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서울: 아카넷, 2014.
- 박통희,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1호, 2010.
- 박희봉·조희창·조연상,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제37권 제3호, 2003.
- 유경준, “우리나라 빈곤주의와 요인분석,” 『KDI 정책포럼』, 제215호, 2009.
- 이승중,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1호, 2010.
- 정해식, 정홍원, 구혜란, 김성근, 김성아, 우선희.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2016-4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서울: 생각의힘, 2020.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15호(2025년 3월 2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정당별·기관별 신뢰 여부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헌재 #선관위』,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45> (검색일: 2025.8.15).
- BBC,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bbc-global-survey-world-divided> (검색일: 2025.6.11).
- Cawvey, Matthew, Matthew Hayes, Damarys Canache, and Jeffery J. Mondak,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Interpersonal and Political Trust,” in Eric M. Uslaner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49) 정해식, 정홍원, 구혜란, 김성근, 김성아, 우선희.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2016-4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50) Norris, Pippa,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Chu, Yun-han and Min-hua Huang, "The Meanings of Democracy: Solving an Asian Puzzle," *Journal of Democracy*, vol. 21, no. 4, 2010.
- Chu, Yun-han, Hsin-hsin Pan, and Wen-chin Wu, "Regime Legitimacy in East Asia: Why Non-Democratic States Fare Better than Democracies," *Global Asia*, vol. 10, no. 3, 2015.
- Dalton, Russell and Nhu-Nhu Ong, "Authority Orientations and Democratic Attitudes: A Test of the 'Asian Values' Hypothesis,"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6, no. 2, 2005.
- Diamond, Larry, "Facing Up to the Democratic Recession," *Journal of Democracy*, vol. 26, no. 1, 2015.
- Diamond, Larry, *The Spirit of Democracy: The Struggle to Build Free Societies Throughout the World*, New York: Times Books, 2008.
- Glanville, Jennifer L., Pamela Paxton, and Yusheng Wang, "Social Capital and Generosity: A Multilevel Analysi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vol. 45, no. 3, 2016.
- Hahm, Chaibong, "South Korea's Miraculous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19, no. 3, 2008.
- Huang, Min-hua, "Cognitive Involvement and Democratic Understanding," in Tun-jen Cheng and Yun-han Chu (eds.), *Routledge Handbook of Democratization in East Asia*, Abingdon: Routledge, 2017.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Lipset, Seymour Martin, "Som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Legitim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3, no. 1, 1959.
- Magalhães, Pedro C.,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Support for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53, no. 1, 2014.
- Myers, T.E., "Asian Values Debate," in D.K. Chatterjee (ed.), *Encyclopedia of Global Justice*, Dordrecht: Springer, 2011.
- Norris, Pippa, "Social Capital and the News Media,"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 7, no. 1, 2002.
- Norris, Pippa, *Democratic Deficit: Critical Citizens Revisit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OECD, "Income Inequality,"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검색일: 2025.6.11).
- OECD, "Social Spending," <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 (검색일: 2025.6.11).
- OECD, *Beyond GDP: Measuring What Counts for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Paris: OECD Publishing, 2018.
- Ortmann, Stephan and Mark R. Thompson, "China and the 'Singapore Model,'" *Journal of Democracy*, vol. 27, no. 1, 2016.
- Park, Chong-Min and Shin Doh Chull, "Do Asian Values Deter Popular Support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Asian Survey*, vol. 46, no. 3, 2006.

- Paxton, Pamela and Robert Ressler, "Trust and Participation in Associations," in Eric M. Uslaner (ed.),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oberto Stefan Foa and Yascha Mounk, "The Democratic Disconnect," *Journal of Democracy*, vol. 27, no. 3, 2016.
- Roberto Stefan Foa and Yascha Mounk, "The Signs of De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28, no. 1, 2017.
- Schattschneider, E.E.,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 Statista, "Taiwan Inequality and Social Spending," <https://www.statista.com> (검색일: 2025.6.11).
- Steven Levitsky and Lucan A.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Wang, Ching-Hsing, "Social Networks, Interpersonal Trust, and Support for Democracy in East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vol. 3, no. 2, 2015.
- Yoon, Kwang-Il, "The Individual-level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for Democracy in East As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4, no. 1, 2017.
- Zhai, Y., "Values of Deference to Authority in Japan and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58, no. 2, 2017.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Support for Authoritarian Regimes
in Post-Democratization Korean Society

Kang, Woojin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nduring authoritarian nostalgia in South Korea by applying five theoretical model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authoritarian nostalgia is rooted in a multidimensional set of factors. The Asian values model—measured through attitudes toward social conflict—significantly predicts both authoritarian nostalgia and reduced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The performance-based framework also demonstrates explanatory power across multiple domains. The economic growth-first model emerges as a strong predictor of both nostalgia for authoritarian rule and explicit support for authoritarian governance. Within the government performance model, negative assessments of the state’s ability to meet basic needs—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are strongly linked to authoritarian nostalgia. In the democratic performance model, two variables—perceived lack of genuine electoral choice and low institutional trust—play a decisive role in shaping support for authoritarian alternative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hat adopt a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strategy, addressing both cultural value orientations and perceptions of institutional performance in order to counter the appeal of authoritarianism.

Key Words : Authoritarian Nostalgia, Asian Value, Economic Growth First Ethos,
Institutional Trust, Inter-generational Mobility.

• 논문투고일 : 2025년 7월 06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8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8월 18일